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배경과 파장

정영태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정치군사팀 선임연구위원

유호열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책팀 연구위원

지 난달 말 북한이 대포동에서 쏘아올린 '발사체'의 실체와 관련, 미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9월 9일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확인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든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어떤 물체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함으로써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뉘앙스를 띤 태도를 표명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을 내린 美 국방부의 판단을 수용하는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는 것으로 미루어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인공위성일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더 싣고 있는 듯하다. 한국 정부도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으나, 궤도에 올리는데는 실패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든 탄도미사일이든 모두 군사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체 개발은 보다 긴 사정 거리의 미사일 개발 정책의 일

환이라는 것이다. 황보한 한국통신사업단장이 「문화일보」 9월 7일자 대담에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 발표를 액면대로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위성발사체 능력은 세계 10위권에 들며,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수 있는 능력이나 인공위성 자체의 능력은 자체 제어 능력이 없는 선전용 수준이란 것이다. 이렇게 볼 경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험은 결국 군사적 시위 노력의 하나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노력 역시 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 개발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

북한은 1976년 이집트에서 구소련제 스킨드-B(SCUD-B) 미사일 2기를 도입하였고 중국 기술 지원 하에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1984년 동해 무수단미사일시험장에서 2회 시험 사격이 있었는데 1차에서 사정 거리 234 km였으며, 2차에서는 1차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의 사정 거리 500 km였다. 80년대 들어서 평남 잠진미사일생산공장에서 양산

(1986년)을 시작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이 100여 발 이상(월 8~10 발)이나 되었다. 이어 1993년 5월 노동 1호(100~1,300 km) 시험 발사를 거쳐 성능 개량 및 작전 배치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최소 5~7 기의 작전 배치가 완료 또는 배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함북 대포동시험장에서 시험 발사된 발사체가 북한이 그동안 독자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2단 추진 기술 개발을 넘어서 3단계 추진 기술 개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사정 거리 5,500 km 정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대포동 1호(1,700~2,200 km)'에 더하여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 '대포동 2.3호' 미사일 개발 역시 성공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겠다.

위성 시험 발사 의도

그런데 북한의 이번 '발사체' 시험 발사는 대내외적 측면을 겨냥한 다목적용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 4일 이번 함북 대포동에서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었으며, 인공위성은 궤도에 진입해 정상 운행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군사적 목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면서 발사체 능력을 직접적으로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 군사적 강국 이미지는 김

일성·김정일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연결되어 왔는데, 이번 대포동발사체 시험 발사는 정권 창건 50돌(9.9) 및 김정일 최고위직(국방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김정일의 '군사 업적'과 '군사 대국'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강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지난 1993년 5월말 노동1호를 조기 시험한 것 역시 7월 27일(6·25휴전협정일)의 '조국해방전선승리 40주년기념일'을 맞아 '대내외에 대한 힘의 과시 효과' 창출을 통한 김일성·김정일 정권에 대한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었다. 특히, 북한은 지난 8월 22일 평양방송을 통해 주장한 강성대국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소위 광명성1호로 명명하면서 '발사체' 시험을 강행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미사일 기술을 아시아·중동 지역에 수출하게 되면 전세계적으로 분쟁의 확산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향후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공식적 입장 표명에 관계 없이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및 실전 배치를 통해 남북 군사적 역학 관계에서 보다 우월한 입지를 확보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일 미군기지 및 태평양 상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의 개발은 유사시

한미·미일·한미일간 안보상 미묘한 입장 차이를 표출시켜,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 체제 유지를 위협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일본 전역을 사정권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일본의 군비 확충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1994년 10월 북한이 '핵카드'를 이용, 북미제네바합의를 끌어낸 것처럼, 이번에는 '미사일' 또는 위성 카드를 이용해 북미 미사일 협상과 북일 수교 협상사 대미·대일 협상력 제고를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도 분석된다. 북한은 핵합의 이행, 북미미사일회담, 대미 및 대일 관계 정상화, 그리고 남북 교류 및 대화 등의 다양한 현안을 호혜적인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나갈 경우, 외부의 압력에 '끌려가는' 입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 실질적인 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하여 협상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입장을 관철코자 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발사체 발사 시험이 북미고위급회담 진행 중에 강행되었으며, 1993년 5월 노동1호미사일 발사 시험 역시 1993년 7월 27일 핵협상 관련 대미회담을 앞두고 실시되었다. 동시에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발족 직후인 1988년을 정점으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계속 감소해왔다는 점에서, 주요 미사일 구매국에 북한 미사일의 위력을 시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1987년 이후 스커드(SCUD)를 수출 주종 상품화하여 1987~92년간 이란, 시리아, UAE 등에 완제품 250여 기(5.8억 달러 상당)를 판매했다. 1998년 4월 6일 발사된 파키스탄의 '가우리' 미사일은 중국·북한의 기술·부품 지원 하에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며, 1998년 7월 23일 발사된 이란의 새하브-3미사일은 '북한 노동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아 개발' (7월 23일 美 백악관 대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험 시험 발사의 파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제 북한이 의도한 목적에 상관없이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북미회담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핵과 생물·화학 무기의 운반체로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북미제네바합의의 중요성과 합의 내용의 준수 필요성을 미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만약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이 위성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처음부터 인공위성 시험 발사를 공표했다라면, 또는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3단계 분리를 사전에 탐지하였다면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물론 위성의 궤도 진입을 성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추진 로켓 개발 능력을 갖추었

다면, 이는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지만 북미회담의 극적 효과는 달랐을 것이다. 북한은 이같은 과장 효과를 사전에 계산하였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북한 중심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게 해주었다. 9월 말부터 본격화될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는 그 자체가 북한에 가져올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미제네바합의에서 양자가 합의한 바 있는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의 촉발점이 된다는 점에 보다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는 적성국무역금지법, 테러리즘 관련 입법 조항, 핵확산 방지 관련 입법 조항 등 그 관련 규제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희망하더라도 의회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고, 의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는데 장애물이 제거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대북 경제 제재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기로 양자가 합의한 것은 북한이 절실히 바라고 있는 미국에 의한 체제 보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뉴욕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북미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같은 전반적인 북미 관계 개선의 일

환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재확인한 북미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동결함으로써 전세계적인 핵비확산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네바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대북 대체 에너지 제공과 경수로 2 기 건설을 약속했다. 그러나 43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경수로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개발과 수출이 자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직결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사일 개발과 수출은 북한의 중요한 외화 획득원의 하나이고, 이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개발 및 수출 포기애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아내고자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10월 초로 예정된 제3차 북미미사일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미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 커다란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직접 이해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이같은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보상 계획에 참여하도록 미국으로부터 종용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미사일 개발 경쟁을 벌이거나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보다는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적 보상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수

도 있다는 논리 하에, 미국 주도의 또 다른 국제컨소시엄이 구성될 경우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와 같이 또 다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수도 있다.

우리의 대응 태도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시험 발사에 대해 필요 이상의 공포와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선 그 군사적 위협이 심각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유도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여지도 있다. 북한이 적어도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지는 못하였다는 것은 북한의 기술이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국가의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3단계 추진 로켓을 개발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듯이 인공위성일 경우 그 목표가 단순히 어떤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있는 것이라면, 현 단계 진정한 목표는 오히려 정치적 선전을 위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 선전은 선전 그 자체로서의 가치만 있지 선전을 선전이 목표하는 현실의 과장에 집착할 경우 그 선전은 기대 효과를 충분히 충족시

키게 될 것이다.

북한이 약간의 경제적 실리를 보상받는 대신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을 수락한다면, 이는 북한을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확보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핵개발 동결이라는 규범과 제도를 준수하고 있듯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편입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라는 체제를 보다 예측 가능하고 보다 안정적인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과의 많은 현안에 대해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할 우리로서는 비록 현 단계에서 북한의 남한 당국 기피 정책으로 인해 제한적인 민간 교류·협력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본격적인 남북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 사회의 규범과 제도의 틀 속에 편입된 북한은 훨씬 안정된 파트너일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확인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군사 안보적 대응 태세의 확립이 절실했다. 반면에, 이에 못지 않게 향후 전개될 북한의 행동과 의지를 한·미·일 3국이 어떻게 변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 관계 개선 및 통일 한국의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